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¹⁾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자산 불평등은 세계 주요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구성하는 주요 축으로 대두

OECD 국가 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

◇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둔화로 소득이 정체하는 한편 자산가격의 급등이 계층 이동을 제약하면서 자산 보유가 경제적 계층 이동을 제약하는 현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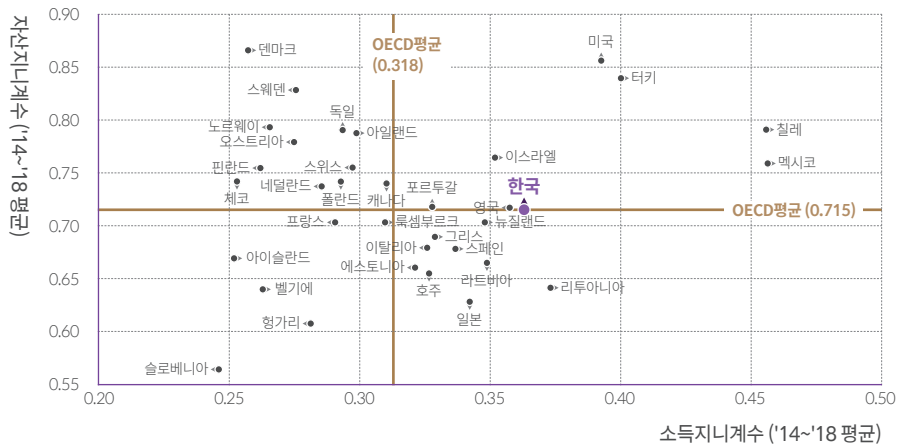
- 부동산이나 금융 등 자산 불평등을 소득 불평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주요한 축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회계층을 연구하는 사회학 영역에서는 익숙한 관념
- 전통적 경제학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즉 기여분)만큼 가져가는 것을 효율적이고 ‘공정’(fair)한 분배로 규정하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음

기존의 주류 경제학은 공정한 요소소득 배분을 위배하는 지대 추구의 결과로서의 불평등을 문제 삼음

◇ 경제적 불평등도에 따른 국가 유형은 Esping-Anderson의 소득재분배 유형과 Schwartz and Seabrooke(2009)의 금융제도 관련 유형을 결합한 네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 가능

- 소득분포는 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하므로 시장소득 및 국가별 재분배정책의 강도를 반영하는 한편, 자산분포는 국가별 경제·금융시스템을 통한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을 반영

[그림1] OECD 국가의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주: 지니계수는 2014-2018년 기간 중 통계가 제공되는 연도의 값을 평균하여 사용
자료: OECD, Stat

1) 본 브리프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0-36『경제적 불평등의 특성과 조세정책의 과제: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이선화 외)를 토대로 하여 내용 및 자료를 추가하고 보완하였음

◇ 한국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고 자산 불평등도가 낮음, ‘동아시아형’ 국가군에 속하였으나 최근에는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도는 낮아지면서 자산 불평등도는 높아지는 변화가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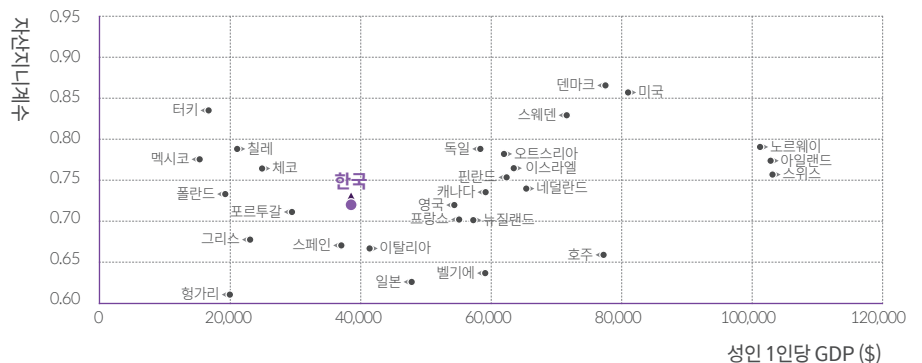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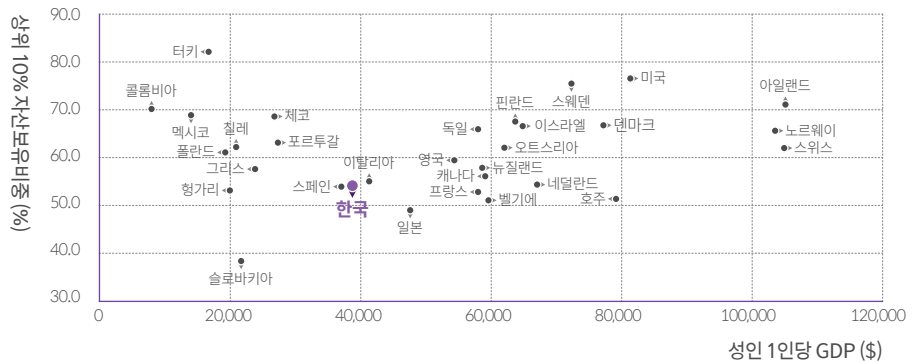
-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미국, 멕시코, 터키보다는 양호하지만 OECD 국가 중 높은 편으로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과 유사

◇ 소득 수준대별 자산 불평등도 특성: U자형 분포

- OECD 국가의 사례를 보면 일정 정도의 소득수준까지는 상위 10% 자산보유 비중 및 자산 지니계수로 평가한 자산 불평등도가 하락한 반면, 성인 1인당 GDP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자산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소득을 조세정책 또는 재정지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는 국가별 재분배정책의 결과를 반영하며 자산의 경우 재분배 정책의 정책 지표로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분포를 그대로 보여줌
- 소득 수준에 따른 자산 불평등도의 U자형 분포는 소득 수준의 상승 ⇒ 경제성장률 둔화 ⇒ 부/소득 배율 및 자본소득 비중 상승이라는 피케티의 설명(자본주의 제1, 2법칙)과 일치

이는 경제성장이 둔화함에 따라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근로소득의 몫이 줄어들고 자본소득의 몫은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음

[그림2] OECD 국가의 소득 수준(GDP)대별 자산 불평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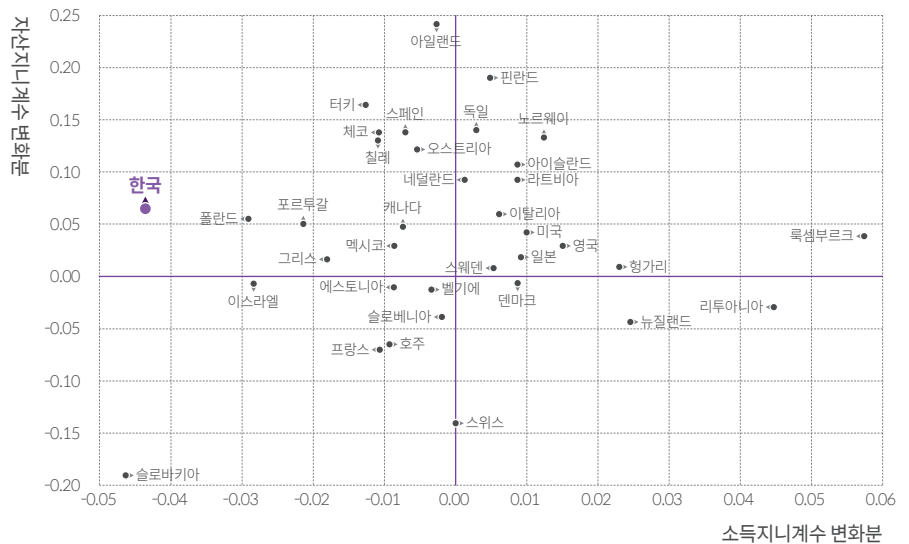


주: 2018년 기준이며 자산 지니계수는 [그림 1]과 동일 / 자료: OECD, stat; Credit Suisse, 「Global Wealth Databook」

2010년대 이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전개 방향

- ◇ 2010년대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도의 방향은 국가별로 다양한 반면, 글로벌 자산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OECD 대부분 국가의 자산 불평등도는 악화됨
 - [그림 3]은 2010년대 초에서 말기까지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분(X축)과 자산 지니계수의 변화분(Y축)을 보여줌
- ◇ 2010년대 소득 불평등도 변화방향
 - OECD 36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소폭 개선되고 나머지 17개국은 악화
 - 한국은 불평등도 수준은 여전히 높으나 2010년 이후 OECD 국가 중 소득 지니계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 2010년대 자산 불평등도 변화방향
 - 36개 국가 중 25개 국가에서 자산 불평등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불평등도가 유의미하게 완화된 국가는 스위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불과
 -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국가별 재분배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였으나 자산 지니계수는 재분배정책이나 금융체제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악화
-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한 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등도는 악화
 - 자산 불평등의 절대적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진행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음
 - 특히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75~80%에 달하는 만큼 한국에서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소유 불평등에 기인한 바가 큼
 - 부동산시장으로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이 집중하면서 부동산은 가계 부문의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계층 이동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

[그림3] 2010년대 OECD 국가의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변화 방향



자료: OECD Stat

주: 1) 자산 지니계수는 2010년과 2018년의 차이를 계산한 값임. 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2018년(또는 2017년)에서 과거 추정치(대부분 2010년 또는 2011년)를 차감한 값임.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2015-2017년 기간의 변화분임.

2) 1사분면: 소득 및 자산 불평등도 모두 악화, 2사분면: 소득 불평등도 악화, 자산 불평등도 개선, 3사분면: 소득 및 자산 불평등도 모두 개선, 4사분면: 소득 불평등도 개선, 자산 불평등도 악화

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주요 논점

- ◇ **J. 스티글리츠는 불평등 그 자체가 아닌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평등의 심화를 문제 삼으며 공정한 룰을 통해 지대를 근절하고 생산 기여도에 상응하는 소득 배분을 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
 -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 불평등이 정치 불평등을 만들고, 정치는 시장에서의 게임의 룰 및 요소 소유자 간 관계와 규범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정치 시스템에 의한 불공정 구조가 지대 추구 행위와 불평등에 책임이 있다는 것
- ◇ **T. 피케티는 요소배분 과정에서 시장이 공정하게 기능하는 것만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
 - 총요소생산성 정체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경제성장률이 금리보다 낮아지는 조건 하에서 자본소득 배율(국민소득 대비 일국의 자본 총량) 및 전체 소득에서 자본의 몫인 자본소득 비중 상승
 - 즉 성장 둔화가 소득 대비 부의 배율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원천(노동, 자본)별 소득의 편중성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동학하에서 자산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제공
 - 자본과 노동 사이에 근본적 비대칭성이 내재하기 때문에 전통적 경제이론이 규정하는 불공정성이 제거되고 시장경쟁에 기초한 요소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라는 ‘자본주의’의 경향성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
- ◇ **자산 불평등을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로 규정하는 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 악화의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 자산과세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함**
 - 자산과세를 통해 소득과세를 보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한 합의는 개념적, 제도적으로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
 - 유럽의 부유세, 글로벌 자본세(global capital tax), 포괄적 소득과세(‘소비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 과세원리)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 ◇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소유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를 적극 활용**
 - 부동산세제는 유럽식 부유세의 한계인 조세회피로 인한 세원의 해외 유출에서 자유롭고 저성장에 따른 소득세, 소비세 등의 세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는 미실현소득을 경제적 능력 지표로 삼는다는 점, 부채에 대한 과세, 개인과 법인 간 과세체계의 차이, 금융자산·특허권 등 기타자산과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 평가체계의 불안정성과 불형평성 등 과세체계 상 다양한 한계를 가짐
- ◇ **결국 금융이나 부동산에 대한 부유세를 통해 자산 불평등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이라 할 수 있음**